

광주·전남 여름휴가철 고속도로로 사고 4년새 33% 늘었다

지난해 32건 발생 72명 부상...원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75% 전국 평균 42% 급증...순항제어 기능 과도한 의존 위험 요소 부각

여름 휴가철(7-8월) 광주·전남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가 4년새 33.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총 3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72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지난해 총 3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었으나 7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24건의 고속도로내 교통사고로 58명이 다친(1명 사망) 데 비해 사고 건수(33.3%)와 사상자 수(24.1%) 모두 늘었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2020년 사고 9건(사망 1명·부상자 20명)에서 2023년 6건(부상자 17명)으로 줄어든 반면, 전남은 2020년 사고 15건(부상자 37명)에서 2023년 26건(부상자 55명)으로 급증했다. 광주·전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96건,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8명, 2030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사고건수는 41.8% 증가(632건→896건)했으며 사상자수도 40.6% 급증(1463명→2058명)했다. 광주·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운전자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24건, 75%), '안전거리 미확보'(4건, 12.5%)가 합계 87.5%를 차지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전방 주시 태만,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 등으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뜻한다.

전국 고속도로에서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0건, 61.4%), 안전거리 미확보(260건, 29.0%) 두 가지 위반사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특히 최근 자동차에 탑재된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ACC) 일명 '크루즈' 기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C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보조 기능으로 휴가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 ACC 등 주행보조 기능 이용

(추진 포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건이며 17명이 사망했다. 올해에만 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9명에 달했다. 공단은 ACC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인식 제한 상황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주행속도가 빠른 만큼,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ACC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항상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침단3지구 공사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장성군 주민들이 30일 오전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 트랙터 등을 세워두고 광주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침단3지구 공사 피해 심각”...장성 15개 마을 주민들 트랙터 시위

차량 40대 동원 꺾기대회 광주시에 주민 피해 대책 요구

장성군 일대 15개 마을 주민들이 광주시의 침단 3지구 공사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하며 광주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월정마을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장성군 주민 등 100여명은 30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월출동 일대에서 트랙터와 트럭 등 차량 40대를 동원해 꺾기대회를 열고 "광주시는 침단3지구 개발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광주도시공사가 침단3지구 부지 내 아파트 조성부지의 지반고(대지의 높이)를 인근 장성군 마을보다 90cm 높게 조성해 침수 우려가 커졌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재 농경지로 활용되는 부지의 지반고를 높이면 마을이 저지대가 돼 침수 우려가 커지므로, 공사에 앞서 침수 대비 작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장성군 월정마을 일대에서는 폭우로 인해 학림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되고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주민들은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26일 주민들과 협의를 마치고도 전에 일방적으로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강행하고 흙을 쌓아올리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광주도시공사는 흙 쌓기 작업의 경우 이미 관할청 승인을 받고 추진한 것이며, 월정마을 일대가 침수구역인 만큼 배수 계획 또한 이미 세워졌다는 입장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상이 지체되면서 공사 기한이 빠듯한 시점이라 공사장 내부 우회도로부터 개설하기 시작했다"며 "배수 능력 개선을 위한 학림천 폭 확장 공사도 오는 9월까지 관할청 승인을 받아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전국 최다 교육특구 보유 지자체 됐다

1차 7곳 이어 2차 10개 시군 선정

전남도 내 10개 시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남은 7개 지역이 지난 1차 시범지역에 지정된 것을 비롯해 모두 17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전국 최다의 교육특구를 보유한 지자체가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선정 결과 순천·여수·담양·구례·곡성·화순·함평·영광·장성·해남 등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완도·진도·보성·장흥·고흥은 예비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기획서를 제출받아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이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부로부터 지자체 대응 투자에 따라 매년 최대 30억 특별교부금 지

원과 특례를 적용받아 운영하게 된다. '글로벌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내세운 3유형에는 ▲여수의 '신에너지·마이크로 관광산업' ▲담양·곡성·구례의 'K푸드산업' ▲화순·함평·영광·장성의 '인재유치 교육특화' ▲해남의 '해양관광융복합'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매년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교육감과 기초지자체장이 협약을 맺은 1유형으로는 ▲순천의 'K디즈니'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3년의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예비지정된 ▲완도·진도의 '해양관광융복합' ▲보성·장흥·고흥의 '미래농생명산업'은 3차 공모에서 보완사항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글로벌 박람회의 성공을 통해 전남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었고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전국 최다 선정되면서 이를 다시 확인했다"며 "5개 예비 지정 지역도 전남도와 협력해 재공모, 전남의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여수 섬 주민 드론으로 생필품 받는다

8월 둘째주부터 'K-드론' 서비스

8월 둘째주부터 여수지역 일부 섬 지역민들이 드론으로 생필품과 배달 음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여수지역 섬인 금오도·송도·대항간도·소항간도·대두라도·소두라도·상화도·하화도·제도에서 K-드론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여수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자체에 드론배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수지역에서 드론으로 배송 할 수 있는 물품

은 라면·커피·세제 등 생필품과 치킨, 짜장면, 빵 등 30여 종에 달한다. 다만 무게는 3kg이내여야 하고 배송비는 5000원이다. 10km이내 유인섬과 육지간 배달이 가능하며 구간당 주 1-2회 주기로 운영된다. 섬 지역의 경우 주민이 생산한 농·수산물도 역배송할 수도 있다. 여수의 경우 '여수플라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8월 둘째 주부터 드론 배달이 시작된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했으며 지자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 배달점, 드론상항실 설치와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